

【 종합 】

# 1억 이상 증가 광주 11명·전남 20명

## ■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 박광태 시장 24억원·박준영 지사 14억원

### 작년 국회의원 1인 평균 1억8천만원 늘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4명중 3명이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역 국회의원의 재산이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인당 평균 1억8천만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지난해 1억6천만원 가량 재산이 늘었으며, 특히 고위법관은 평균 4억1천200만원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28일 각각 공개한 2007년 12월31일 현재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광주시 23명의 공직자 중 18명(78%)이, 전남도는 71명 중 50명(70%)이 재산이 늘었다. 또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린 공직자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11명,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는 각각 24억4천400만원, 14억4천400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박준영 지사는 14억4천400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광주시의 경우 시장과 시의원, 산하 공기업 사장 등 23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사람

은 18명이었고 재산이 준 공직자는 정구선 환경시설공단 사장과 유재신 의원 등 5명에 불과했다.

최고 재력가는 이날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리를 옮긴 임우진 전 행정부시장으로 28억4천여만원의 신고했다. 지난해에 비해 16억4천100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한 임 전 부시장은 경기 용인수지구 상가분양에 따른 수입금 등이 포함됐다. 임 전 부시장 측은 재산신고 내역에 미포함된 건축비와 세금 등을 감안하면 증가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원이 20억7천여만원, 나종천 의원이 17억4천800여만원,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15억7천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도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고위 공직자는 양승일 전남도위원으로 재산총액이 22억7천700만원 늘어난 52억5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등록하지 않았던 장·차남의 재산을 새로 등록한 데다 부동산 매매(2건)로 수익을 거둔데 따른 것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 광주시 공직자 재산변동

성명	직위	총액	증감
박광태	시장	24억4천400만	+4억2천800만
임우진	행정부시장	28억4천400만	+16억4천100만
김윤석	경계부시장	6억2천364만	+2억4천239만
박희원	시의회위원장	8억1천663만	+3천970만
김후진	시의회부의장	3억3천586만	+1억1천253만
이철원	시의회부의장	3억9천456만	-2억2천436만
김남일	의원	14억580만	+558만
김동식	의원	2억7천995만	+8천399만
김성숙	의원	4억9천566만	-1억5천195만
김일출	의원	1천773만	+7천76만
나종천	의원	17억4천862만	+4억4천867만
손재중	의원	5억9천483만	+3억7천359만
송재선	의원	1억9천466만	+9천999만
유재신	의원	1억7천983만	-3억9천719만
이명진	의원	4억7천267만	+6천781만
이정남	의원	3억9천694만	+119만
조광현	의원	-1억311만	-1억384만
조호국	의원	5억3천264만	+4억5천769만
전진기	의원	20억6천919만	+19억3천887만
안순일	교육감	6억9천453만	+1억673만
유대영	동구청장	4억5천514만	+5천759만
전주연	서구청장	15억924만	+2억5천426만
황일봉	남구청장	3억6천925만	+1억1천285만
송광문	북구청장	11억1천194만	+6천848만
전갑길	광안구청장	3억9천724만	+5천243만

## ■ 전남도 공직자 재산변동

성명	직위	총액	증감
박준영	지사	14억4천400만	+3억7천294만
이상민	정무부지사	17억1천306만	+4억6천434만
김종철	도의회위원장	5억140만	-777만
김정남	부의장	1천899만	-1천212만
김태부	부의장	6억940만	+1억2천300만
강성중	의원	6억9천432만	-1억6천638만
김우석	의원	4억8천511만	+4천172만
김우영	의원	-1억1천137만	+1억9천843만
김중호	의원	11억313만	-34만
고승자	의원	2억2천943만	+2천694만
고혁윤	의원	2억6천301만	+6천941만

구중근	의원	8억7천627만	+1억7천226만
국영애	의원	4억6천811만	-3천326만
김발육	의원	2억9천659만	+6천527만
김서원	의원(해남)	29억6천921만	-5억5천445만
김석원	의원(무안)	3억2천242만	+7천820만
김성호	의원	10억9천238만	+8천749만
김철주	의원	34억6천360만	+4억3천838만
나병기	의원	2억5천797만	-3천198만
나종석	의원	-2억2천826만	+620만
남기호	의원	2억5천856만	+45만
박민환	의원	2억1천335만	+1천506만
박찬수	의원	2억9천678만	+2천91만
박태수	의원	-2천929만	+458만
박홍수	의원	14억5천386만	+2천766만
서일용	의원	3천381만	+502만
송대수	의원	13억2천205만	-830만
송남기	의원	1억986만	+190만
송주호	의원	1억5천474만	-523만
신문식	의원	4천932만	+5천558만
양승일	의원	52억555만	+22억4천738만
윤시석	의원	2억9천171만	+6천352만
이기영	의원	2천183만	-8천199만
이동환	의원	8천795만	+2천638만
이만우	의원	1억3천761만	+4천345만
이부남	의원	2억6천854만	+1천862만
이정윤	의원	432만	+765만
이일영	의원	-2억5천800만	-2천159만
이종현	의원	5천587만	-412만
이택우	의원	3억2천839만	-1억9천406만
이훈규	의원	25억1천363만	+1억5천307만
이희재	의원	1억986만	+8천931만
임준원	의원	1억6천102만	+1천342만
장 일	의원	-8천782만	+293만
정창욱	의원	4억9천114만	-1억3천709만
정환태	의원	3억1천729만	+217만
조상태	의원	14억1천930만	-1억2천787만
최종선	의원	7억1천154만	+1억7천494만
홍시원	의원	5천516만	425만433
황병순	의원	1억1천411만	+1천840만
황정호	의원	1억2천333만	+1천228만
황호용	의원	3억7천233만	+45만

## 시설

### 광주상의 '변화와 개혁' 약속 주시한다

지난 1월 14일 오랜 진통 끝에 새 회장을 맡은 광주상공회의소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시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광주를 국제적 도시로 키우고 지역민에게 그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상의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회장은 광주상의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토 서남권 발전을 위해 전남·북, 제주 상공회의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이들 지역 9개 상공회의소가 서남권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사무국장단 회의를 회장단 회의로 격상시켜 2개월마다 정기적 모임을 갖는 등 광주상의가 호남·제주권 지역발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상의의 이 같은 공격적 행보는 지방상의

가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또 광주상의 운영을 올해부터 회장중심체제로서 상공의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광주상의는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파벌을 형성해 회원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슬한 파행을 빚어왔다. 따라서 회장중심체제의 탈피는 회원 화합과 상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 회장의 의지와 실천이다. 상의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회장의 과감한 기득권 포기와 포용력,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상의는 약속한 대로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실천해 진정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3조원대 투자협약 '관광 전남' 앞당겨라

전남도가 다도해와 해안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을 본격화했다. 전남도는 최근 서울에서 관광자원개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고 16개 업체와 모두 2조9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관광 전남'의 미래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은 리조트와 테마파크, 예술인 한옥마을, 시푸드(Sea-Food) 타운, 지리산 컨벤션센터, 은퇴자 도시 등 다양하다. 산업화 시대에 '버려진 땅'으로 여겼던 전남의 섬과 해안, 호수, 산 등이 개발 대상이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수려한 풍광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땅값은 전국 평균(㎡당 2만원)의 26%에 불과하다. 무안군 제곡항과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망도 속속 확충되는 등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2012년 여수엑스포까지 열리면 관광수요는 넘쳐날 것이다.

성공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상 해양산업(주)은 여수엑스포에 대비, 지난 2003년부터 여수 오션리조트와 화양관광단지 개발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백R&C가 신안군 중도에 개장한 휴양시설 '엘도라도 리조트'도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투자협약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일이다. 전남도는 협약을 맺은 16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토지 매입을 거의 끝낸 상태여서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관광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투자협약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과 배려는 필수적이다. 업체의 부지 선정이나 토지 매입을 적극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전남도가 각종 관광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 北 인권보고관 임기

### 유엔, 1년 연장 의결

#### 한국도 표결서 찬성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7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최종 결의에 다수결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으며, 북한 대표는 발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된 관련 결의안을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면서 반발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친 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며, 47개 이사국 중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이집트,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비트 문타온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최명남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는 발언을 통해 "결의안의 목적은 EU와 일본과 같은 서방이 구인권위원회 때의 대결구도를 재생시켜 개도국들을 비롯해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선택적인 공격을 일삼으며 재판관 행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우주선 발사 D-10 훈련하는 이소연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왼쪽)씨가 27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함께 탑승할 러시아 우주인 세르게이 볼로프, 올레그 코노넨코와 함께 막바지 훈련을 펼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대운하 내년 4월 착공 한다”

## 국토해양부 보고서

민간의 제안 이후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또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경우론한 관련 기초적인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사업자가 물

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연계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 지원할 필요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통상의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3~4년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절차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한반도 대운하사업 민간제안에 대비해 준비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일 뿐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경찰 대운하 반대 교수 '성향조사' 논란

경찰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에서 활동하는 교수에게 접근해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 등을 묻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관악경찰서 이모 경위 등 정보과 경찰 3명은 26일 오후 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A교수를 찾아가 모임의 성격과 참여 교수의 성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 모임이 정치를 연관했는지 특정 정당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으며 A교수는 약 10분여에 걸쳐 이 모임이 정치색을 배제해 정당과는 무관하고 교수들이 각자 학자적 소신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부 교수는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이

제 대학에 정보과 행사까지 재등장하기 시작했다. 5공으로 회귀하는 듯한 사태를 아쳐해야 하나"며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A교수는 "이 경우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압력이 있었다면 나도 문제를 삼겠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상황을 설명했으나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위는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었더니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일상적 정보수집 활동이다. 특별한 의도나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A교수에게 인사하려 간 차에 대화를 나눈 것 뿐이다"며 "기회가 있으면 모임에 참여하는 다른 교수도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 빛日만평

- 김중두



마지 못해 쳐다 보긴 한다마는...

## “여수 엑스포 특색있게 열것”

### 장승우 조직위원장

장승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은 28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2010 상하이(上海)세계박람회와 비교해 특색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전남 여수시청을 방문해 지역 주요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12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작고 알차게 개최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참가국을 늘리도록 외국과 접촉하고, 전남도와 여수시는 홍보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한승수 국무총리가 다음달 24일 정부 지원단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여수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현섭 여수시장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엑스포’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합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대 국회가 개인하면 국회 차원에서 여수세계박람회 특위를 구성해 조직위원회를 적극 돕도록 하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에 상하이세계박람회에 참석함으로써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와 홍보관을 둘러보고 이날 오후 상경했다.

/여수=박영기기자 yk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11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대담부	2200-628	정체부	2200-616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